



코스피 2355.05 (-15.81)	코스닥 812.70 (-17.97)
금리 (미국 3년) 0.925 (-0.009)	환율 (원/달러) 1132.90 (+1.00) (22일)



[뉴스]  
무서운 전월세 상승세  
강서 마곡  
두 달 새 2억 ↑  
02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인천 송도의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를 방문,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문 대통령이 스마트시티 선도 모델 도시인 송도를 방문한 것은 지역균형 뉴딜 관련 첫 번째 방문이자, 여섯번째 한국판 뉴딜 현장 행보다. /연합뉴스

## “스마트시티에 10조 투자 (5년 내) 15만개 일자리 만들 것”

文 대통령 ‘지역 뉴딜’ 행보  
인천 송도 스마트시티 방문

올 말 데이터 통합플랫폼 보급 확대  
국민 60% 스마트시티 체감 목표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한국판 뉴딜 사업 일환인 ‘지역균형 뉴딜’ 현장 행보로 인천광역시 송도 스마트시티를 찾았다. ‘한국판 뉴딜은 도시문제 해결이다’라는 주제로 가진 현장 행보에서 문 대통령은 먼저 이날 오후 송도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를 방문했다.

현장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로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해 점검했다. 스마트시티는 도시에 IC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해 도시 인구 집중에 따른 주거·교통·환경 등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모델이다.

특히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이날 방문한 송도는 스마트시티 개념을 처음 도시 관리에 도입하고, 지난 20여 년 동안 지속 발전시켜 주민들의 삶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바꾼 상징적 장소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스마트시티를 두고 ‘시대적 과제로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정책’이라고 표현한 뒤 “이제 우리는 한국판 뉴딜로 세계 최고의 ‘스마트 시티’ 국가로 나아가고자 한다.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2025년까지 스마트시티 사업에 10조원을 투자하고, 15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스마트시티를 전국적으로 더 빠르게 실현하겠다”며 “정부는 올해 말까지 데이터 통합플랫폼 보급을 전국 108개 지자체로 확대하고, 전 국민 60%가 스마트시티

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 철도 등 공공인프라를 디지털화하겠다. 또한 하천과 댐, 상하수도, 도로에 원격 제어시스템을 구축해 장마와 폭우, 산사태, 화재 등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며 “물류, 배송의 디지털화를 위해 2022년까지 로봇과 드론 배송을 활용한 스마트 물류시범도시를 조성하고, 2025년까지 100개의 스마트 물류센터를 만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2027년까지 레벨 4단계의 완전 자율주행 세계 최초 상용화’, ‘지자체 및 기업과 협력으로 국가 스마트시티 역량 확대’, ‘도시 데이터를 공유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새 서비스를 만드는 스마트시티 산업 생태계 육성’ 등의 전략도 발표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이날 자율협력주행체계(C-ITS) 장비를 개발하는 디지털 SOC 중소기업인 쉐카네비콤도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현장 생산라인 시찰 이후 기술연구소로 이동해 레이저빔으로 실거리를 측정하는 자율협력주행 핵심부품라이다(LiDAR) 센서 시연과 자율협력주행체계 연구개발 모습도 둘러봤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SOC 디지털화의 성공을 위해 많은 기업이 투자하고 기술개발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이번 일정은 지난 13일 시·도지사 연석회의에 이어 지역균형 뉴딜 관련 첫 번째 지역 방문이자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전후로 ▲데이터댐(6.18) ▲그린에너지·해상풍력(7.17) ▲그린 스마트스쿨(8.18) ▲스마트그린 산업단지(9.17) ▲문화콘텐츠 산업(9.24)에 이은 여섯 번째 한국판 뉴딜 현장 행보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 “코로나 극복” 협업생태계 절실 규제 밸런스 유지, 제약 급성장

메트로신문 ‘2020 제약&바이오’ 포럼  
혁신신약개발 생태계 중요성 절감  
규제산업 불구 신속심사 등 좋은경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지만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했다. 전례 없는 팬데믹 이후 K-방역을 이끈 제약·바이오산업이 ‘국가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임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21일 메트로경제와 메트로신문 주최로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열린 ‘2020 제약&바이오 포럼’에 모인 전문가들은 코로나19는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이 다시 한번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포럼은 ‘포스트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를 주제로, 웨비나 형태로 진행됐다. <관련기사 L7·L8면> 기조강연을 맡은 허경환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Co) 대표는 “오랜 시간 코로나19 해결을 위해 고민하며 전 세계가 진중하게 협업하는 시대를 맞이했다”며 “한국은 그동안 K-방역을 통해 상당히 발전했고, 이를 계기로 우리의 현재 위치를 검토하고, 어떻게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갈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메트로미디어는 지난 21일 서울 중구 페럼홀에서 ‘2020 제약&바이오포럼’을 개최했다. 웨비나(웹+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대표이사가 강연을 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코로나19는 혁신 신약개발을 위한 생태계의 중요성도 절감하는 계기도 제공했다.

허 대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은 협업의 중요성과 혁신 신약개발을 위한 생태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진중하게 경험하고 논의하게 됐다”며 “이런 계기는 향후 K-바이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국산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서는 것도 큰 기회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과 치료제 자체 개발을 끝까지 성공시키겠다”고 약속하며 제약·바이오 기업들에 지원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대표이사는 “메르스 위기로 방역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하듯, 코로나19를 계기로 민관 협력 시스템을 안착시켜야 한다”며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수출과 연구개발을 더욱 매진하는 것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조언했다.

허 대표는 “제약·바이오는 규제 산업이지만 코로나19를 계기로 신속 심사, 치료목적허가 등의 과정을 거치며 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규제가 이루어지는 좋은 경험을 하고 있다”며 “정부가 규제 밸런스를 맞추는 과정을 습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세경 기자 seellee@metroseoul.co.kr

## 몰아치는 경제3법... ‘기업근간 흔들’ 아우성

뉴메트로 5주년 기업과 함께 한 5년, 함께 할 50년

2부. 포스트 코로나  
③ 기업을 춤추게 하라

기업경영·투자 제약 과도한 규제  
재계, 해외 투기자본 간섭 등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밀어붙이는 ‘공정경제 3법’에 기업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입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경제 3법이 기업 경영과 투자에 제약을 거는 과도한 규제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공정경제 3법은 상법 일부 개정안,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을 총칭해 일컫는 말로, 기업의 지배구조를 바로잡아 경제 민주화를 실현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3법 중 기업의 반대가 가장 거센 건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 ▲감사위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지난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비대위원장실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분리선출 ▲대주주 3% 의결권 제한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한 명 이상을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임하는 제도다. 또 대주주가 3% 이상의 지분을 가졌어도 의결권을 3%로 제한해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재계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는 해외 투기자본의 기업 경영 간섭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지난해 5% 미만의 소수 지분으로 현대자동차·현대모비스에 자사 추천 사외이사 선임을 시도한 사례가 있었다. 엘리엇은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법이 개정될 경우 국내 기업이 해외 투기자본에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이 큰 것도 사실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 14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 3법 태스크포스(TF)와의 정책간담회에서 “국제 투기자본과 국내 투기펀드의 공격, 소액주주의 소송남발,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3% 룰에 따라 경쟁사 내지 관련 펀드가 내부 경영체제로 진입한다면 기업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사법대응 능력과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대형 외부 세력의 공격과 소액주주에 의한 소송남발에 휘말리게 돼 경영 자체가 휘청거릴 수 있다”고 말했다.

다중대표소송제란 모회사 주주가 회사에 손해를 입힌 자회사 경영진에 소송을 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면에 계속>

/김현정 기자 hiki@